

‘新권력’ 韓, 尹에 ‘화합·단결, 대화·타협 정치’ 포부 전달

현충원서 신임 지도부와 참배 제3차 추천 ‘채상병 특검’ 주장 김건희 여사 검찰조사 우려도 “집권여당 강점, 시너지 낼 수 있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철호(왼쪽)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받고 있다. /뉴스시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의 등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 대표로 상징되는 ‘신(新) 권력’과 ‘구(舊) 권력’의 충돌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선과 민심이 국민의힘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 것처럼, ‘신 권력’으로 떠오른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전략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며 공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탑에서 신임 지도부와 참배한 것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한 대표는 방명록에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 대표는 국회로 와서 기자들에게 자신이 제안한 제3차 특검을 추천하

는 ‘고(故) 채 해병 특검법안’ 추진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은 채 해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종료 후 필요성이 있으면 특검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들께서 (정부여당이) 진실을 규

명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새로운 제안을 내 것”이라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저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유를 묻고 싶다. 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야당이 한 대표에게 제3차 추천 방식의 채 해병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남의 당론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며 “저희는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는 정당이고 제 뜻에는 변함이 없다. 저희 당이 가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겠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23일)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조사한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그동안에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영부인께서 결단해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후속 논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간 만찬에 앞서 자신을 예방하러 국회로 온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어제(23일) 윤 대통령과 짧게 통화했지만, 당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좋은 정치하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말했고 윤 대통령은 격려해주셨다.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여당의 강점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제가 윤 대통령과 함께 당을 이끌면서 집권여당과 윤석열 정부가 여러 저항을 받는데, 역경을 이기고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해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23일 여의도 모처에서 친한계 의원 10여명과 회동했는데 이 자리에는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장동혁·진중오 의원과 송석준(3선) 의원, 김형동·박정하·배현진·서범수(재선) 의원, 김소희·김위상·유용원·정성국·한지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들을 중심으로 정책위의장, 지명직 최고위원, 여의도연구원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전략기획부총장·조직부총장), 당대표비서실장·정무실장(특별보좌역), 대변인단 등을 꾸릴 가능성이 높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방통위 2인체제 운영’ 野 책임 vs 대통령실 추천 없어

(興)

(野)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興 “野, 2명 추천했다면 5인체제 완성” 野 “尹, 野 추천 위원 한 명도 임명 안 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시

여야가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측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인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가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으로만 운영돼 온 것이 야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로부터 방통위원·방심위원 추천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홍일 전

위원장 탄핵 추진은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불법성을 야당이 지적했기 때문”

이라며 “만약 이 후보자가 지난해 8월 방통위원으로 임명됐다면, 야당의 불법성 주장이 통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진숙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저도 같은 의견”이라며 “3인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는 2인 체제는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 추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이 후보자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는데, 야당에서 두 명의 방심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했다면 5인 체제는 완성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 쪽에서 나머지 두 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해 주고 국민의힘에서 한 명 더 추천해서 5인의 상임위원회를 만

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방심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을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2021년 3월 30일 방통위원으로 내정됐을 때, 국회에서 의결한 이후 7개월 7일 동안 법제처 자격 심사를 핑계로 임명을 하지 않았다”며 “근데 법제처는 아직도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황열현 방심위 부위원장 몫으로 추천했지만 임명하지 않았고, 최선영 위원은 민주당 추천 몫이었는데, 8개월이 지나도 임명이 안 되고 7월 22일 임기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정훈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이 후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으나 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추천 요청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 발언에 이어 “본인(이진숙)을 임명했다면 3인 구조가 된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추천한 2인과 여당이 추천한 1인으로 방통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는 불법의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원 추천은 여야가 함께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취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모든 일은 2인 체제에서 비롯됐다”며 “정부가 야당 몫의 훌륭한 방통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적극적으로 훌륭한 위원들을 추천한다면 (정부가) 거절할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윤도현 기자 yunbgb0611@

법사위,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상정... 공청회·청문회 추진

興 “韓 당 대표 업무 첫날부터 특검법 올리는 법사위 정상인가”

려 하자, 여당 법사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에 대해 항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4일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향후 공청회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대필을 비롯한 가족의 비위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호 안건이 한동훈 특검법이다. 의혹 하나하나가 소위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 정상적으로 했던 일들”이라며 “특검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청문회에서 소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국가적인 큰 사건 인양 특검을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됐다. (업무) 첫날 여당 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도 했다.

이어 송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유사 이래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응해서 받았다”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민국에서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많은 협조를 했는데도 특검을 하자고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안이다.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특검을 하자고 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헌법 제49조는 국회의사결정을 다수결로 하라고 하고 있다. 한 석이라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다수결 표결 원칙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사위에 고유 법안 6건을 상정한 것은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 출범 이래 법사위에 계류된 법을 상정한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안건 상정 후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체토론

을 실시한 후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했다.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청회와 청문회를 위해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공청회 또는 청문회 실시 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기로 했다.

또, 양육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에게 자녀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리법(민법 개정안)’, 공수처 권한과 규모를 강화하는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 교계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도 법안심사제1소위로 넘기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의원들에게 충분히 대체토론의 기회를 주고 토론을 지연시킬 의도가 있을 때 이를 표결로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며 형식적인 대체토론만 듣고 이를 표결로 종료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은 양당 간사간 협의를 하게 돼 있고, 협의가 안되면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표결에 부칠 수 있고 안 부칠 수도 있다”며 “위원장이 되고 나서 국회법을 보니까 위원장의 권한이 크다”며 정당화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여야이견으로 계류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태홍 기자